

한전, 3년에 걸쳐 2천여명 감축

◇대통령 발언 이후 개혁 급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을 공개한 경영 개선의 '모델'로 칭찬한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농촌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은 조직·인력·사업·경영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지만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이었다. 업무지원을 줄이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무능력한 '조직발전 저해자'를 퇴출시켜 정원을 15%(844명) 감축한다는 게 농촌공사 계획이다. 살아남는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이 자진 반납한 올해 임금상분 40억원과 2급이상 간부직의 급여 10%를 더해 51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 퇴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만행' 한전도 감축 추진=농촌공사에 이어 공기업의 만행 격인 한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기업에 전방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영 효율 10% 높이기 작업에서 인력 및 조직 구조 조정이 핵심과제로 급부상한 데 더해 정부가 보수와 복리후생 상의 방안 경영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기업 구조조정 '농촌공 모델' 적용 될 듯 기능·조직·인력 감축...복리후생도 '사정권'

국전력도 감원 대열에 합류했다. 10~14개 독립사업부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한전의 현 정원은 2만 1천700명인데, 정원 10% 감축을 적용해 2천명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당장 10%를 줄이고 해고하는 게 아니라 희망· 명예 퇴직제도 등을 활용해 3년 가량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철도시설공단도 2011년까지 현재 인원 1천545명

의 10.3%에 해당하는 159명 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사 인력을 현장으로 전환 배치하고 조직도 슬림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조직 슬림화와 3~4년에 걸친 감원 등이 조직·인력 구조조정의 대세를 이루면서 다른 공기업들의 '따라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화를 추진 중인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도 '열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산하 연구개발(R&D) 유관 기관이나 진흥원들에 대한 통합화도 추진되면서 이들 기관의 중

복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완 요구, 복리후생도 '사정권'=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계획을 제작시킬 것을 최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뿐 아니라 보수나 복리후생제도가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구조조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산하 69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조 요청' 공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지경부는 이 공문에서 "보수·복리후생의 방안 경영요인의 제거, 불필요한 조직·예산·인력의 감축을 통해 기관별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제고해 달라"며 ▲기능·조직·인력감축 ▲방만 경영요인 방지시스템 정립 ▲과도한 복리후생제 정비 등 보수시스템의 합리적 개편 ▲수수료·부담금 인하 등을 예시했다.

수출보험공사가 내년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경영진의 연봉을 40% 삭감하기로 결의한 것은 보수 감축의 사례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세균(왼쪽에서 세번째) 대표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 상황에 대비, 무능한 현 경제팀을 경질하고 IMF 위기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과 카드채 사태를 비롯해 그 이후 상황을 잘 관리한 능력을 보여준 분들을 기용해 위기관리대책팀을 만들 것을 정부·여당에 주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원 세비 10% 반납하자"

"前 정부 인사 포함, 위기 대책팀 구성" 제안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정부에 위기 관리대책팀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도 세비 10% 반납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 상황에 대비, 무능한 현 경제팀을 경질하고 IMF 위기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을 기용, 위기관리대책팀을 만들 것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다"며 "이를 통해 제2의 IMF 조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국내각 구성을 의미하는지는 질

문에 대해 정 대표는 "물론 야당은 빠진다. 민주당은 빼놓고 당과 관계 없는 모든 인재를 모아 폭넓은 인재풀을 활용, 비상대책팀을 만들려는 뜻"이라며 "K, L, H, J 씨 등 현재 당내에 있지 않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사 람들을 두루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거론한 인사는 김중진 전 의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한덕수 전 총리, 장대환 전 총리서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또 "내년도 국회의원 세

비의 10%를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고 통분담을 시작해 고용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국회가 결 단하고 예산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우리 당만이라도 반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법안 합의와 관련, "종합 부동산세 등 그 내용에 대해 당내 논의 거쳐 거의 만장일치로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어 차피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면피성 대책만... 농협 개혁의지 있나

MB 질타에 구조조정 등 쇄신책 내놔 중앙회장 인사권 제한 등 핵심은 외면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은 농협이 연일 구조조정과 인적쇄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회장 인사권 제한 등 문제의 핵심은 외면하고 면피성 대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가라시장 질책' 직후 농협은 각 사업부문 대표 등을 불러모아 6시간에 걸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지주사 도입을 지배구조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금융지주사와 사업지주사로 떼어내면 자연스럽게 중앙회나 중앙회

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각 부문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약해진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각 지주사와 지주사 대표에 대한 중앙회장의 개입 범위, 인사권을 법과 정관 등 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체제만으로 지배구조 개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제 도입, 적자 지회사 통합 등 구조조정안은 기존 사업을 열거한 수준에 불과하

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없는 중앙회장 중심의 지배 구조와 어려운 농업 여건을 외면한 방안 경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협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이다.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 지위가 비상임직으로 격하됐지만, 농협법 130조에 따라 여전히 회장은 중앙회 전무이사 와 신용·경제 등 각 사업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여전히 농협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조합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제출한 '농협개혁 과제'에서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을 회장이 아닌 인사추천 위원회에 맡길 것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박연차 소환 임박...檢 '자금흐름' 집중 추적

박연차-노건평-정대근 '삼각 커넥션' 실체 규명 박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의 개인돈·회삿돈이 세종증권과 휴켄스 주식 처매입 등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 추적하고 있다.

박 회장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2과는 이날 휴일임에도 전원이 출근해 태광실업 등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국제성이 넘긴 각종 세부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은 국제성이 넘긴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이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 후반께 박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미 "세종증권 주식 처매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시인한 바 있어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은 예정된 수준으로 접쳐진다.

검찰은 '세종증권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휴켄스 할값 인수 및 주식 매매', '홍콩법인 조세포탈' 등 3대의

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 회장 및 가족의 개인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태광실업·휴켄스·정산개발의 회계자료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태광실업을 박 회장 개인이 운영해 개인 돈과 회삿돈의 경계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차명으로 사고관 세종증권 주식이 더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한편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세종증권과 휴켄스 인수과정 전반에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삼각 커넥션'이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선진 '2중대 발언' 설전

민주당은 6일 자유선진당을 '한나라당 2중대'라고 지칭한데 반발, 선진당 당직자들이 여야 원내 대표 회담장에 난입한 데 대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선진당은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2중대'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거듭 요구하며 강력 반발, 여야 3당간 '12일

예산안 처리' 방침이 최종 확정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선진당을 한나라당 '삼쌍둥이' 또는 '2소대'로 부르며 조롱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선진당이 예산안 협상 도중 갑자기 한나라당에 동의해 협상이 혼란을 초래한 것을 볼 때 선진당에

대한 세간의 지적은 근거없는 비난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선진당의 명예를 훼손한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의 논평을 낸 것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선진당 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 합의를 작성한다면 민주주의에 사망선고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진학설명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강경호 교수 신촌대학교 교수	 황세범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유기희 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박일기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인주 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박한 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300여명 이상의 명교수들이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 체계적이고 철저한 학습
●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을
● 최상의 대학 진학률

개강 1월 2일

기본과정
(1박 2일)

MDPass 醫學원

문의 263-5453 (북구청 맞은편) **문의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서울고시학원 **www.gosigoo.com** 514-4560